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작년 8월2일 오전 하계휴가 때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는 모습. /청와대

슈퍼워크 후 연가 낸 文 비핵화 구상 가다듬나

별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그달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 관저에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지난달 30일 성사된 '남북미 정상간 DMZ 회동'과 연관 깊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또 당시 남북미 정상간 DMZ 회동

으로 인해 결렬됐던 북미정상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휴전 후 66년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았고, 짧은 만남을 기대했던 북미회담은 사실상 3차 북미회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중요한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던 바다. /우승준 기자 dn1114@

윤석열 인사청문회 벌써부터 신경전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권조정·재산증식 의혹 등 쟁점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등 공방벌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법무부 검찰총장은 당 정청(여당·정부·청와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 인사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1일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개안을 일괄 상정해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을 두고 한 시간 넘게 협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오후 재검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 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입장을 뚜렷하게 전했지만,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 또 윤 후보자 재산 65억9077만원 중 49억7000여만원을 배우자 소유로 신고해 야당에서는 처가의 재산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 송기현 의원은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 중 마구잡이식 털기와 가족 망신주기 등이 있다"며 "단순히 추정으로 무차별적 공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사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공직자 덕분 아니냐'고 한다"면서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입증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쟁을 위한 청문회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는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석대성 기자

의정활동 '역대최악' 국회...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

의원 1인당 월 1200만원 챙겨

6개월 의정활동·세비 분석

법안처리 본회의의 단 3차례 불과 의원 298명 월 7200만원씩 받아 법안처리 1회당 2400만원 받은 셈

국회는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여야가 지난 6개월 간 실시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단 3차례, 처리한 법안도 총 421건에 불과했다. 초라한 성적에도 국회의원 298명(현황)은 각자 월 1200만원에 달하는 세비는 꼬박 챙겼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세비를 분석했다.

◆본회의의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씩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직무활동·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는 연 1억5175만9780원이다. 구체적으로 ▲수당 월 748만8910원 ▲상여금 연 1485만2860원 ▲경비 월 392만원 등이다. 월 평균액은 1264만6640원이다.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의원에게는 가족수당·자녀 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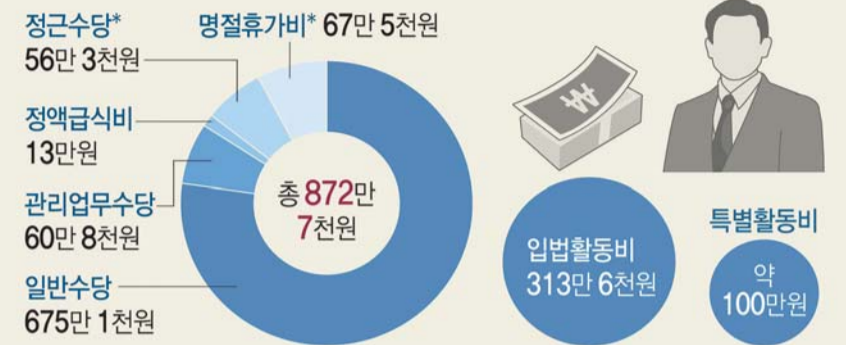
여야는 올해 2·3·4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소집했지만, 4월 국회에서 4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주목할만한 입법 활동은 없었다. 지난 6개월 간 열린 본회의는 모두 12차례, 이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상임위원장 사임·선별을 위한 본회의를 제외하면 단 세 번뿐이다. 의원 1인 평균 올해 가져간 세비는 7200만원, 법안처리 본회의가 세 차례인 것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장관에게 왜 의원 수당을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국무위원은 유은혜(교육부)·김현미(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월 급여 분석

2019년 1~5월,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준



※정근수당: 1·7월에 일반수당의 50% 지급, 명절휴가비: 설·추석에 일반수당의 60% 지급

자료/국회

*월평균 금액

연말뉴스

진선미(여성가족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있다.

통상 장관직에 오르면 의정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5조에 따라 세비는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국정운영에 나선 장관에게 국회 세비를 줄 수 있다는 황당한 규정이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 소지도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을 허용하지만,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부 위정자가 장관직에 올라 행정부 권한까지 쥐면서 '삼권분립' 제도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헌법·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꼴이다. 일각에선 행정부의 견제·균형이 입법부의 비대화로 사라지면서 사법부도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다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수상을 맡고, 의원이 행정 각 부처로 입각하는 방식이다.

◆여야, 비판 이어지자 국회 활성화 마

련... 고개 드는 '국민소환제'

국회 계류 의안 분석결과, 여야는 올 상반기 10여건의 국회 활성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파행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야는 저마다 '정치 불신' 해소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매 국회 때마다 통과가 무산됐던 '국민소환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4일 짝수달 1일 임시국회 개최를 명문·강제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연 일수가 10일 이내면 다음 분기에 지급할 보조금을 10%, 10~20일은 15%, 20~30일 20%, 30일 이상이면 25% 삭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나경원 "동결 끌어내야" 박영선 "상황 고려를"

최저임금 신경전

나경원 "경제 회복에 역할 해 달라" 박영선 "비판이 꼭 승리하는건 아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최저임금 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장관과 만나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동결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너무 반가웠다"며 "정부 내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동결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떻냐"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급 경제지표를 볼 것도 없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로 나쁘다"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 말에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수준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2014년 새정치민

주연합 원내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야당 원내대표가 쉽지 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비판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조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며 "비판할 때는 하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면 조금 더 훌륭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언했다. /석대성 기자